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오는 2013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78%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한나라당은 2015년에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계획보다도 거의 7년을 앞당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해 탱크로리(T/L)로 LNG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LNG가 최선의 유일한 선택인가에 대하여 최근의 T/L LNG 공급 검토 등 급속한 LNG공급 확대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T/L LNG공급 확대의 문제점

### 첫째, T/L공급의 경제성 측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T/L공급의 주목적은 저렴한 가격의 연료공급이다. 하지만 LNG는 운반과 저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오히려 LPG(프로판)보다 공급비용이 높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T/L공급의 경우 기존 배관에 의한 공급이 아닌 차량에 의한 공급으로 차량구입비 및 운송비와 별도로 LNG저장탱크 및 배관 설치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기존 LPG공급시설에 추가한 중복투자 등 전체적인 경제성면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강릉, 속초, 안동 등 지역의 도시가스사들은 LPG+Air방식을 선택하여 공급중이며 나머지 지역도 공급비용 문제로 인해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 둘째, LNG수급불안과 이로 인한 가격상승 우려

지난해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계천연가스시장 국제세미나에서 옥스퍼드연구소 가스분야 연구책임자 조나단스턴 명예교수는 2010년 이후에는 천연가스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12.23 GECF(가스수출국포럼, 16개국) 출범식 기조연설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값싼 천연가스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인도 등의 급격한 에너지 소비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LNG와 같은 특정 에너지 편중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셋째, LPG산업 붕괴

그동안 LPG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서민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으로서 국가에너지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도시가스 공급 조기 확대정책으로 LPG산업은 급속히 설자리를 잃어 붕괴직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T/L공급까지 언급된다는 것에 대하여 LPG업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모 일간지에 한국가스공사의 유동성위기에 대한 기사가 언급된바 있다. LNG를 900원에 수입해서 500원에 국내공급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으로 지난해말 부채가 약18조원(자본금대비 부채비율 432%)에 달하며, 또한 정부의 도시가스 가격인상 억제정책으로 “도시가스는 싸다.”는 착시현상으로 작년에 유독 LNG소비만 늘어나는 기현상을 나타냈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LNG지원정책이 공기업 부실과 LNG로의 쏠림현상을 유도, 에너지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전국 210여개 충전소와 4,700여개소의 판매소를 비롯한 우리 LPG업계는 당초 정부계획보다도 7년씩이나 앞당긴 LNG공급확대로 인해 현재 선택의 대안도 없는 사활이 걸린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T/L LNG공급 확대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LNG위주의 정책보다는 LNG와 LPG의 역할분담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실물경제 침체시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가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불요불급한 중복투자와 제로섬의 경쟁보다는 각 경제주체가 스스로 내실을 다지고 상호협력하는 일체감 조성을 통하여 다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요청되고 있다.